

김중연 선생님 「공무원 ONE 헌법」  
제3판 사용자를 위한 정오표 (2020-09-08)

2021년 교재 「공무원 ONE 헌법」의 오탈자 중심의 정오자료입니다(이는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나아가 이후에라도 정오가 필요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이 역시 바로 자료실 등에 추가적으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 개정 등을 통한 내용의 변경 여부는 본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자료실 등에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개정과 추가되는 판례는 앞으로 진행될 「실전정리 ONE 헌법」에 반영을 하여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P.3 본문수정**

\*(기존)

**1. 존재형식에 따른 개념**

**(1) 형식적 의미의 헌법**

**㉠**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그 내용과 상관없이 헌법전에 성문화된 모든 법규범들을 말한다. 헌법의 제정과 개정은 항상 이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헌법하에서 관습헌법을 인정하는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관습헌법의 개정도 헌법개정에 포함된다.

\*(수정)


**1. 존재형식에 따른 개념**

**(1) 형식적 의미의 헌법**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그 내용과 상관없이 헌법전에 성문화된 모든 법규범들을 말한다. 헌법의 제정과 개정은 항상 이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헌법하에서 관습헌법을 인정하는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관습헌법의 개정도 헌법개정에 포함된다.

**P.5 판례박스 수정**

\*(기존)

**판례**  관습헌법과 성문헌법과의 관계(신행정수도 이전 - 위헌)

① 관습헌법의 인정 : ... (헌재 2004.10.21. 2004헌마554).

② 관습헌법의 요건 : ... (헌재 2004.10.21. 2004헌마554).

**②** 관습헌법의 효력 : 헌법사항에 관하여 형성되는 관행 내지 관례가 전부 관습헌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강제력이 있는 헌법규범으로서 인정되려면 엄격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하며, ... **위반**된다(헌재 2004.10.21. 2004헌마554).

\*(수정)

**판례** 관습헌법과 성문헌법과의 관계(신행정수도 이전 - 위헌)

① 관습헌법의 인정 : ... (헌재 2004.10.21. 2004헌마554).

② 관습헌법의 요건 : ... (헌재 2004.10.21. 2004헌마554).

③ 관습헌법의 효력 : 헌법사항에 관하여 형성되는 관행 내지 관례가 전부 관습헌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강제력이 있는 헌법규범으로서 인정되려면 엄격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하며, ... 위반된다(헌재 2004.10.21. 2004헌마554).

P.7 본문수정

\*(기존)

II. 규범적 특성

1. 최고규범성

가) 헌법은 ... 효력근거가 된다.

나) 그러나 우리 헌법은 미국, 일본, 독일과 달리 최고규범성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 확보하고 있다.

\*(수정)

II. 규범적 특성

1. 최고규범성

가) 헌법은 ... 효력근거가 된다.

나) 그러나 우리 헌법은 미국, 일본, 독일과 달리 최고규범성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 확보하고 있다.

P.31 표수정

\*(기존)

통치구조	i) ... vii) 지방의회 구성을 조국통일 시까지 유예 vii) 헌법개정절차를 대통령의 제안(이는 국회의 의결로 확정)과 국회의 제안(이는 통일주체국민회의 의결로 확정)으로 이원화
------	---

\*(수정)

통치구조	i) ... vii) 지방의회 구성을 조국통일 시까지 유예 vii) 헌법개정절차를 대통령의 제안(이는 국민투표로 확정)과 국회의 제안(이는 통일주체국민회의 의결로 확정)으로 이원화
------	---

PP.55-56 박스수정

\*(기존)

**판례**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 01.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 규정할 수 있다(헌재 2005.6.30. 2003헌바114).
- 02. 남·북한이 유엔(U.N)에 동시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 평화통일의 원칙에 모순되지 않는다.
- 03. 헌법상 통일관련 규정들은 통일의 달성이 우리의 … 것으로 볼 수 없다(헌재 2000.7.20. 98헌바63).
- 04. 북한은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근거하여 …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6.11.30. 2006헌마679).

\*(수정)

**판례**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 ①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 규정할 수 있다(헌재 2005.6.30. 2003헌바114).
- ② 남·북한이 유엔(U.N)에 동시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 평화통일의 원칙에 모순되지 않는다.
- ③ 헌법상 통일관련 규정들은 통일의 달성이 우리의 … 것으로 볼 수 없다(헌재 2000.7.20. 98헌바63).
- ④ 북한은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근거하여 …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6.11.30. 2006헌마679).

P.69 본문수정

\*(기존)

IV. 법치국가와 법치행정

1. 법치행정의 원칙

법치행정이란 행정이 법률에 근거하여 그리고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으로 나타난다.

\*(수정)

IV. 법치국가와 법치행정

1. 법치행정의 원칙

법치행정이란 행정이 법률에 근거하여 그리고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으로 나타난다.

P.70 본문수정

\*(기존)

V. 법치국가와 신뢰보호 - **신뢰보호원칙**

신뢰보호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헌법상 원칙으로서, … 바로 명확성의 원칙이다.

\*(수정)

V. 법치국가와 신뢰보호 - **신뢰보호원칙**

신뢰보호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헌법상 원칙으로서, ... 바로 명확성의 원칙이다.

P.85 본문수정

\*(기존)

7) 헌법 제126조의 내용

**헌법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관리할 수 없다.

(가) 사유재산제도를 기초로 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라 하더라도 ...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단, 기업활동의 자유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은 반드시 법치국가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 즉, 국회가 제정하지 않은 법률에 근거하여 사기업에 규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헌법상 요건을 갖춘 긴급 명령을 근거로 하는 규제와 조정은 가능하다(헌재 1993.7.29. 89헌마31).

\*(수정)

7) 헌법 제126조의 내용

**헌법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관리할 수 없다.

(가) 사유재산제도를 기초로 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라 하더라도 ...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단, 기업활동의 자유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은 반드시 법치국가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 즉, 국회가 제정하지 않은 법률에 근거하여 사기업에 규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헌법상 요건을 갖춘 긴급 명령을 근거로 하는 규제와 조정은 가능하다(헌재 1993.7.29. 89헌마31).

P.91 표수정

\*(기존)

<b>중국산 마늘에 대한 수입제한조치</b>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 간 합의된 중국산 마늘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는 ... <b>그 자체로 어떠한 주관적인 권리를 보장한다고 보기는 어렵다</b> (헌재 2004.12.16. 2002헌마 579).
--------------------------	---

\*(수정)

<b>중국산 마늘에 대한 수입제한조치</b>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 간 합의된 중국산 마늘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는 ... <b>그 자체로 어떠한 주관적인 권리를 보장한다고 보기는 어렵다</b> (헌재 2004.12.16. 2002헌마 579).
--------------------------	---

PP.125-126 본문수정

\*(기존)

**판례** 재외국민 선거권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① ... ③ 입법자가 선거 공정성 확보의 측면, ... 재외선거 투표절차조항은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4.7.24. 2009헌마756).

④ 입법자는 재외선거제도를 형성하면서, 잦은 재·보궐선거는 재외국민으로 하여금 상시적인 선거체제에 직면하게 하는 점, ... 따라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조항은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거나 보통선거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4.7.24. 2009헌마256, 2010헌마394).

⇒ 즉, 재외선거인에게 임기만료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보통선거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입법자가 선거 공정성 확보의 측면, 투표용지 배송 등 선거기술적인 측면, 비용 대비 효율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한다(헌재 2014.7.24. 2009헌마256, 2010헌마394).

\*(수정)

**판례** 재외국민 선거권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① ... ③ 입법자가 선거 공정성 확보의 측면, ... 재외선거 투표절차조항은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4.7.24. 2009헌마756).

④ 입법자는 재외선거제도를 형성하면서, 잦은 재·보궐선거는 재외국민으로 하여금 상시적인 선거체제에 직면하게 하는 점, ... 따라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조항은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거나 보통선거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4.7.24. 2009헌마256, 2010헌마394).

⑤ 입법자가 선거 공정성 확보의 측면, 투표용지 배송 등 선거기술적인 측면, 비용 대비 효율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한다(헌재 2014.7.24. 2009헌마256, 2010헌마394).

P.248 본문수정

\*(기존)

Ⅲ. 인격권의 주체

인격권의 주체로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인정된다. ...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헌재 1991.4.1. 89헌마160). 특히 헌법재판소는 『사자의 경우에도 인격적 가치에 대한 중대한 왜곡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유족에 의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헌재 2011.3.31. 2008헌바111).

\*(수정)

Ⅲ. 인격권의 주체

인격권의 주체로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인정된다. ...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헌재 1991.4.1. 89헌마160). 특히 헌법재판소는 『사자의 경우에도 인격적 가치에 대한 중대한 왜곡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유족에 의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헌재 2011.3.31. 2008헌바111).

**P.350** 정답수정

\*(기존)

정답	01 ①	02 ③	03 ②	04 ②	05 ④	06 ③	07 ②			
----	------	------	------	------	------	------	------	--	--	--

\*(수정)

정답	01 ①	02 ③	03 ②	04 ②	05 ③	06 ③	07 ②			
----	------	------	------	------	------	------	------	--	--	--

**P.576** 본문수정

\*(기존)

**(4) 제한**

**국회의원에세는** 발언의 자유가 있으나, 특히 원내소수파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의사진행방해행위, 소위 filibustering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국회법은 일사부재의 원칙의 확립과 별도로 본회의에서 발언횟수와 발언시간을 제한하며 교섭단체별 발언자수를 제한하고 있다. 국회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정)

**(4) 제한**

**국회의원에게는** 발언의 자유가 있으나, 특히 원내소수파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의사진행방해행위, 소위 filibustering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국회법은 일사부재의 원칙의 확립과 별도로 본회의에서 발언횟수와 발언시간을 제한하며 교섭단체별 발언자수를 제한하고 있다. 국회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607** 본문수정

\*(기존)

**2) 예산안의 심의 및 확정**

(가)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심사기간이 정해져 있다. 즉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며(국회법 제85조의3), 예산안을 심의한 후 회계연도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헌법 제54조 제2항). 예산안의 심의절차는 ... 이 경우 국회의원 5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국회법 제95조 제1항).

\*(수정)

**2) 예산안의 심의 및 확정**

(가)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심사기간이 정해져 있다. 즉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며(국회법 제85조의3), 예산안을 심의한 후 회계연도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헌법 제54조 제2항). 예산안의 심의절차는 ... 이 경우 국회의원 5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국회법 제95조 제1항).

**P.657** 본문수정

\*(기존)

**2) 예산안의 심의 및 확정**

## ② 절차적 요건

긴급명령과 마찬가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헌법 제89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야 한다(헌법 제82조). 긴급재정·경제처분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긴급명령과 같이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다.

\*(수정)

**2) 예산안의 심의 및 확정**

## ② 절차적 요건

긴급명령과 마찬가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헌법 제89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야 한다(헌법 제82조). 긴급재정·경제처분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긴급명령과 같이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다.